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송창용*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통계센터 소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요 약》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 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더욱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인턴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로제타 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층 의무고용제 실시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I. 청년 니트(NEET) 백만 명 시대

■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악화 상황은 매우 심각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 실업상태에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간 취업준비에 머무는 청년을 의미함.
 - ▶▶ 한국형 청년니트(NEET)는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을 포함.
- 2009년 상반기 현재 비경황 청년 취업애로층이 77.9만 명이고, 여기에 청년층 ‘실업자(34.9만 명)’를 합치면 청년 니트(NEET)는 112.8만 명 규모임.

〈표 1〉 청년 니트 규모

(단위: 명)

		15~19세	20~24세	25~29세	합계
니트	비경황 니트*	87,775	328,681	362,497	778,953
	실업자	37,854	119,535	192,034	349,423
전체 인구		3,282,528	2,649,317	3,850,907	9,782,752

주: 비경황 니트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혼 ‘가사’인 사람 +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 ‘발령대기’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결혼준비’ + ‘기타’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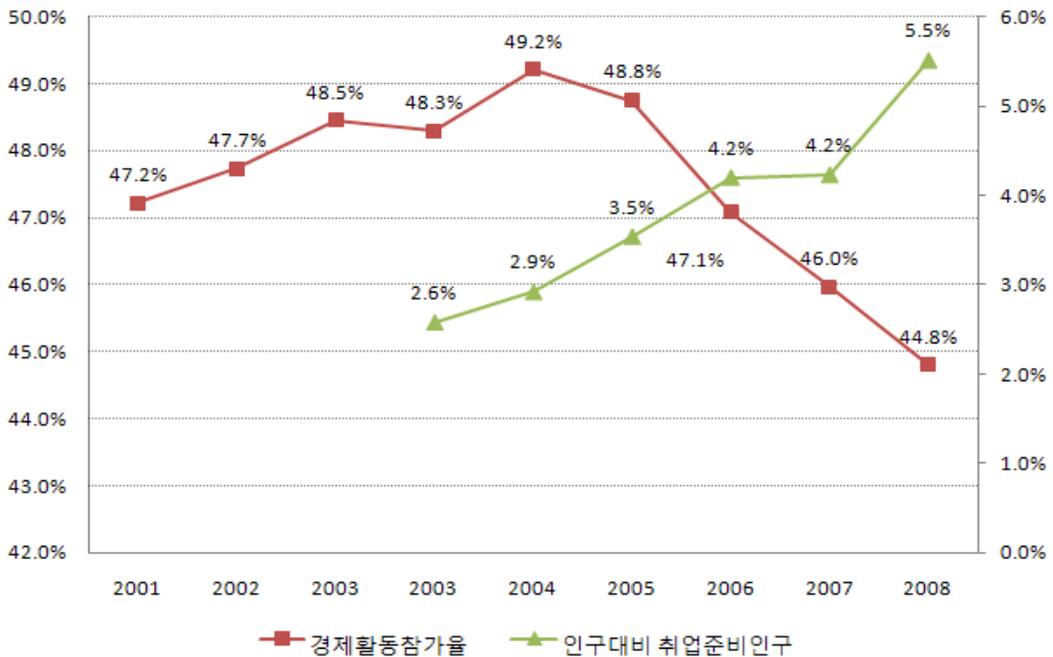
자료: 2009년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 분석

- 청년실업률은 7~8%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청년실업률만으로 청년층의 고용악화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움.

- ▶▶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 45.1%(2004년) → 41.6%(2008년)
- ▶▶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49.2%(2004년) → 44.8%(2008년)

●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해 청년층 경제활동 이탈 인구의 상당부분이 취업준비인구로 전환되고 있음.

- 2008년 청년층의 취업준비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2003년 대비 약 1.7배 증가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취업준비인구 비율의 변화

■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취업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감을 잃게 됨.

- 특히, 자신감 상실이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실업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사회불안이라든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더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 2001년 0.50 → 2005년 0.34 → 2008년 0.28
- 대학진학률 83%의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에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 눈높이에 적합한 국내 일자리 제공에는 한계 존재
- 따라서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나아가서는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II. 청년층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표 2〉 정부의 2009년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용
1. 인턴지원(5개)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관광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
2. 글로벌 취업지원(14개)	해외 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4년제 대학생 해외인턴십/ 글로벌 무역인력양성/ 재외공관 인턴/ 국제전문 여성인턴/ 글로벌 농업청년리더 양성/ 미국 연수취업(WEST)/ KOICA해외봉사단/ 대학생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인터넷 청년 봉사단/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 미래산업분야 청년리더 양성
3. 직업훈련(5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우선선정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한국폴리텍기술 기능인력 양성
4. 진로지도(5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전문계고교 취업지원 기능확충/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여대생 캐리어 개발 지원/ 단기복무 장병 취업 캠프/
5. 장려금 지원(1개)	청년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6. 종합고용서비스(2개)	종합직업 체험관 신축/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7. 창업지원(1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청년실업 대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인턴은 단기적인 일자리로서 청년층의 일자리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인턴제 전체 목표(53,049명) 대비 실적(14,276명)은 26.8%에 불과
- 청년인턴의 대부분인 행정인턴인 경우, 10개월 한시적인 일자리이며 인턴 후에 채용보장이 되지 않음.
- 청년인턴은 실제 현실에서 직업상의 스킬을 연마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 이와 같이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층 실업을 한정된 기간 동안 단절시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표 3〉 청년 인턴제의 활용 현황

	활용처	채용목표	실적(달성률)
행정인턴	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 5,284명 지방정부: 5,640명	중앙정부: 4,641명(88%) 지방정부: 5,706(101.1%)
공공인턴	공기업 근무	12,000명	2,509명(21%)
중소기업인턴	중소기업 (5인 이상 300인 미만)	25,000명	1,100명(4.4%)
해외인턴	해외 사업장	5,125명	290명(5.7%)
계		53,049명	14,276명(26.8%)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 ▣ 해외취업 지원 및 연수 등은 청년층의 직접적인 해외취업과 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 해외취업 희망인원에 비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과거 해외취업이 활발했던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
 - 해외취업 희망자의 희망임금 수준이 높고 고숙련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은 부재
 - 전담 기관의 한계 및 관련기관 간, 민간기업과의 협력 부족으로 해외 일자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4년제 대졸자에 맞춰져 고교·전문대 출신 이하 구직자는 소외되고 있음.

 - 고졸 이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Ⅲ. 정책 제언

1.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청년층 의무고용제

▣ 전체 고용인의 3% 청년 의무고용제 실시

- 5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 임금 지원, 3년차는 임금의 50% 지원)를 대신 지원.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 벨기에 “로제타 플랜”(2000년)

-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조치
- 이를 위반한 기업은 한 명당 매일 74유로(약 1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한 청년에게 들어가는 첫해의 사용자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
- 시행 첫해에 청년 5만 명의 고용 창출

※ 프랑스 “청년고용 사회계약 제도”(2002년)

-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 임금 지원, 3년차는 임금의 50% 지원)를 대신 지원.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10% 해당하는 청년층을 고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학습시간으로 전환하여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2. 일자리 선진화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1994년부터 권고된 OECD의 고용창출전략(Jobs Strategy)의 지난 10여 년간의 평가를 통해

살펴 볼 때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선진고용시스템은 다음의 두 가지 경로(A 유형과 B 유형)를 통해서 가능

- ▶▶ A 유형: 낮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와 낮은 복지지출의 결합을 통한 유형
- ▶▶ B 유형: 높은 복지지출수준(관대한 복지급여)과 적극적 구직활동의 장려를 통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유형

- 우리나라의 경우 A 또는 B 유형의 선택 문제에 앞서 A 와 B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임.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취약한 고용안정서비스 기능은 구직자의 심층상담과 직업알선을 통한 실업의 해소(activation)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미작동은 취약계층에 대해 적절한 직업훈련기회의 제공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규 중소기업의 기술 창업 지원

-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80%를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창출 없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난 10년간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절대적으로 감소한 반면(약 12.5만 명 감소),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은 약 314.4만 명 증가함.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규 창업(특히 기술창업)임.
 - 중소 기업은 혁신이나 신기술 채택에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산출량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게 됨.
 - ▶▶ Brandt(2004)의 OECD 국가의 고용, 생산성에 대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신규 진입률이 높을수록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음.

3. 해외 일자리 창출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 세계韓商대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해외 한인회 등과 연계한 청년층의 해외진출 확대, 실질적인 정보 및 인력 교류
 - ▶▶ 중국의 경우 화교네트워크(www.wcbs.com)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현지 정착과 동화에 성공
 - ▶▶ 인도의 경우 미국인도재단(American India Foundation), 인도인전문가네트워크(Network of Indian Professionals) 등 분야별·지역별·종교별 단체를 조직하여 인도인의 해외진출 지원
-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해외주재원, 글로벌 기업 등을 활용한 체계적 해외취업정보 수집 및 유통인프라 구축
 - ▶▶ 해외공관, KOTRA, 재외동포재단, 해외진출 업체 등을 통한 해외취업정보 수집, 각국 상공회의소, 국제 봉사단체, 현지 민간알선업체 등을 통한 구인정보 분석 등

■ 대학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청년 해외 진출 유도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직업중심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을 도입,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 한동대학교는 미국의 3년제 로스쿨 과정과 똑같이 운영되는 국제법률전문대학원을 국내 최초로 설립,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전문법조인을 양성. 2009년 8월 현재 73명의 졸업생이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이중 22명이 해외 로펌 및 법률 관련 NGO에 취업중임.
 - ▶▶ 2004년부터 추진된 부산시와 부산소재 19개 대학(2009년 현재)이 참여한 해외인턴사업은 대학이 학생들의 해외인턴기회 제공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로 연간 600여명의 해외인턴 진출 지원, 참여기관과 대상국 매년 증가 추세

※ 전문대 졸업생의 해외취업 현황

- 올해 전문대 졸업생 403명이 해외 22개국에 취업(4월 1일 기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취업 국은 일본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9명, 미국 37명, 호주 17명, 그 밖에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등에 취업
 - 해외취업이 활발한 전공분야는 관광, 정보기술(IT), 호텔경영, 디자인, 전문세공, 미용, 통역 등으로 나타남.
 - 대학별로는 영진전문대학 133명, 안산1대학 33명, 경남정보대학 26명, 배화여자대학·우송정보대학 각 20명, 백석문화대학 19명, 명지전문대학 16명, 부산정보대학 13명 등 44개 대학
 - 반면 해외에 취업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전체 146개 전문대학의 70%선으로 아직은 해외취업이 쉬운 길이 아님을 보여줌.

■ 정책 총괄기관 선정 및 해외 취업 종합 정보망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해외인력진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 필요
 -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 선정 필요
 -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 총괄기관에서 각 해외 산업과 구인 수요를 분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총괄기관 선정 필요
 -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 세계 70개국에 95코리아 비즈니스센터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해외 투자개발, 프로젝트 투자 진출,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의 s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외 현지에서 원하는 인력의 수요를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 등 정책을 총괄하기에 적합함.
- 해외 구인사이트 분석 제공과 해외 취업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 해외 구인 사이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외 취업과 연계된 정보를 제공
 - ▶▶ 현재 통계청,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전체 해외 취업자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
 - 취업 준비부터, 현지 생활 정보, 귀국 후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
 - 정책 총괄기관에서 해외인력진출 관련 통계 및 해외취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함.
 - ▶▶ 해외취업 종합전산망(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인 “월드잡 사이트” 활용)을 보강하여 각 기관별로 분산된 모든 해외취업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류지성 외(200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송창용 외(2009).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HRD Review, 12-8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8). 『일자리 선진화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